

수도권 주민 열에 여덟 “DMZ 개발, 환경적 가치 우선”

경기연구원, 남북 환경협력 방안 보고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개발 활용 제시

남북관계가 개선돼 개발이건이 좋아져도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인 비무장지대(DMZ)를 보전하고, DMZ 접경지역을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개발의 중심축으로 활용하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됐을 때를 대비한 환경 분야별 남북협력방안과 DMZ 인근 지역의 개발과 활용 방안을 제안한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연구에 앞서 수도권 주민 1007명을 대상

으로 지난 7월 남북 환경협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87%가 DMZ의 환경적 가치가 높다고 응답했다. DMZ와 접경지역 활용 개발 시 우선시해야 할 핵심 가치로는 경제(17%)보다 환경(62%)을 선택했다. 남북 접경지역의 주거지 형태로는 67% 응답자가 마을단위의 분산된 주거지를 선호했으며, 접경지역의 에너지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66% 응답자가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선택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환경분야별 협력방안은 △산림생태계종 피해회복, 임묘장 현대화 △수변 관측망의 확립, 한강하구 거버넌스 운영 △취수원과 취수방식 결정 △세계기록유산 설치 및 자원순환계획 수립 지원

△모·태양과 배출원 조사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 구축 △남측의 재야와 북측의 천연물 소재를 결합한 연구개발(R&D) 추진 등이다.

또 보고서는 세계적인 생태보고인 DMZ 인근 지역은 보전방안을 구체화한 다음에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DMZ 보전방안으로는 국립공원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DMZ 인근 지역은 원과 에너지 자립에 기반한 개발방식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상수도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물

을 직접 취수함으로써 경제적 물류 공급하고,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을 지향 주거지 건설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특히 광역상수도는 규제로 인한 상·하류 간 갈등과 단일취수원 의존에 따른 위험성 등의 문제가 있고, 원천이나 산(해)맥발전소 등에 의존한 에너지 공급체계는 변화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일으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산업연구원은 “환경과 개발 전문가, 환경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한 ‘DMZ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핵심사업인 DMZ 인근 지역에 기존의 남측 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발전방식을 창조해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수원=김주홍 기자

DMZ·접경지 개발 최우선 가치 ‘환경’ 꼽아

남북 관계 중요성이 커지면서 DMZ 발전 방향이 주목받는 가운데 수도권 주민들은 DMZ 환경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DMZ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DMZ 발전위원회’를 구축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

경기연구원,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수도권 주민 설문… 경제 17% 불과

은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연구원은 수도권 주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DMZ와 접경지역의 활용·개발 시 우선시해야 할 핵심 가치로 주민 82%가 ‘환경’을 지목했으며 ‘경제’는 17%에 불과했다.

이에 연구원은 환경 분야별 협력방안으로 ▲자연환경(산림 병해충 피해회복, 양묘장 현대화) ▲하천(수변 영충구역 설정, 한강하구 거버넌스 운영) ▲상하수도(취수원과 취수방식 결정, 하수시설 기술 지원) ▲에너지(소형 태양광 지원,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 구축) ▲보건(남측의 재야와 북측의 천연물 소재를 결합한 R&D 추진, 남북 가속전염병 공동대응)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DMZ 보전방안으로 국립공원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강조했다. 이외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한 이후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DMZ 보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 등도 언급했다. 이처럼 기존 개발 방식과는 다른 접근 방향이 필요한 DMZ에 대해 별도로 환경·개발 전문가, 관련 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주장도 명시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백자상대인 DMZ 인근 지역에 기존 남측 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발전방식을 창조,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여송규기자

수도권 주민 80% 'DMZ 개발 경제보다는 환경이 중요'

경기연구원, 수도권 주민 대상 설문조사
DMZ 국립공원-세계문화유산 등재
'보전방안으로 가장 효과적' 제안



수도권 주민 10명 중 8명은 보전방안
다(78%) 전경지역 활용·개발 시 우선순
인 핵심가치로 응답(77.1%)하는 결과
(82%)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67%는 남북경제구경
원 개발방안이 좋아서도 DMZ의 환경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보전방안이 낫다고
답했다.

또한 남의 보전방안이 우수지 않다면
은 응답자 57%가 마을단위의 보전방안

제안을 선호했으며, 남부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확대 대해서도 응답자 84%가 타
당하다고 평가했다.
경기연구원 지난 7월 수도권 주민 1

천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남의 환경협
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DMZ의
외곽지역 보전방안과 지속 가능한 발전모
델 개발이 중요하다고 응답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에 30쪽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결과 DMZ의
일부지역의 경우 경제력 가치보다는 환
경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분석하면서 ▶
산외지역에 관광·레저, 문화·관광 ▶
수원권공공의 시설, 한강하구 거버넌스
운영 ▶공수권과 주민복지 증진, 우수시
설 기술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순환계획 수립 지원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시민공공서비스 지원 ▶
소형태양광 지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는 에너지 지원기술 지원 ▶남북
과학교류 프로그램 지원 ▶DMZ의 남북
협력사업의 공공대응성

평가 방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DMZ 보전방안으로 국립공
원 지정과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장 호
감되어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영동지역지구제(Young)한
역동화나 산출기, 풍물기, DMZ의 관
광시설 고대관 산출기지역 등도지역
지구제를 결합해 보전방안을 위한 방
안도 제시했다.
또한 보전방안이 높은 보지할 때일수록
다수 국민이 공공적으로 DMZ 보호
조치에 동의할 것이라는 평가도 담고
있었다.

연구를 수행한 이기영 선임연구원은
"환경과 개발 전문가, 관련기관 등이 폭
넓게 참여한 'DMZ 지속가능 발전위원
회'(가칭)를 만들어 백지상태인 DMZ 인
근 지역에 기존의 남북 개발방식의 한계
를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발
전방향을 창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모
델을 구상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966-99

“DMZ 개발시 환경적가치 우선시”

경기연구원, 보고서 발간

수도권 주민 10명 중 8명 이상이
DMZ(비무장지대) 개발 시 환경적 가치
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
로 조사했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환경 분
야별 남북협력방안과 DMZ 인근 지역의
개발과 활용 방향을 제정한 '경기도의 남
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주민 1천명을 대상으
로 지난 7월 실시한 남북 환경협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

조사 결과 수도권 주민 87%가 DMZ의
환경적 가치가 높다고 응답했다.

DMZ와 접경지역 활용·개발 시 가장
우선시해야 할 핵심가치로는 응답자의
82%가 환경을 꼽았다.

이어 경제적 가치 17%, 기타 1% 등의
순이었다.

접경지역 주거지 형태로는 마을단위의

수도권 주민 1천명 설문조사
남북 환경협력 관련 핵심가치
82% '환경' 꼽아... '경제' 17%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구상 제안

분산된 주거지(67%), 신도시 형태의 주
거지(30%) 등의 순으로 선호했다.

접경지역 에너지 공급방식에 대해선
응답자의 66%가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
너지를 선택했다.

경기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남북
의 환경 분야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자연환경 분야 산림병해충 피해회복과
양묘장 현대화, 하천분야 수변 완충구역
설정 및 한강하구 거버넌스 운영, 상하수
도 분야 취수원·취수방식 결정 및 하수시
설 기술지원, 자원순환 분야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및 자원순환계획 수립 지원 등
이다.

또 대기 분야에선 모니터링과 배출원
조사 및 사업장 관리기술 지원, 에너지
분야는 소형 태양광 지원 및 임진강 생물
권보전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 구
축, 보건은 남측의 제약과 북측의 천연물
소재를 결합한 R&D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세계적 생태보고인 DMZ 인근
지역은 국립공원 지정이나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DMZ 보전방안을 구체화 한 뒤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새로
운 형태의 개발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
다고 제안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기영 선임연구원은
"환경과 개발 전문가, 관련기관 등이 폭
넓게 참여한 'DMZ 지속가능 발전위원
회'(가칭)를 만들어 백지상태인 DMZ 인
근 지역에 기존의 남북 개발방식의 한계
를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발
전방향을 창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모
델을 구상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안경희기자 jing@

## DMZ 활용방안이 가르쳐 준 가치의 전환

개발과 보전은 자연을 대하는 양날의 칼이다. 반목과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고 조화와 상생을 창출하기도 한다. 개발은 파괴의 다른 이름으로 둔갑할 수도 있고 보전은 제자리걸음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래서 개발본자와 보전본자 사이의 대립은 필연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환경단체 '도롱뇽의 친구들'이 경상남도 양산시 천성산 도롱뇽을 지키기 위해 낸 '경부고속철도 공사 중지 가져본 소송'이다. 대법원이 2006년 6월 2일 공사 중단 이유가 없다고 판결, '개발'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듯 보전이 개발을 이기는 사례는 드물다. 여러 이유를 들어 법은 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은 곧 돈'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논리다.

그런데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寶庫)'로 불리는 DMZ에 대해서 '개발보다 보전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신선하다. DMZ는 보전하고 접경지역을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개발의 중심축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경기연구원(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다. 배경에는 연구원이 지난 7월 실시한 '남북 환경협력 관련 설문조사'가 있다. 수도권 주민 1천 명을 대상으로 물었는데 87%가 DMZ의 활용가치가 높다고 응답했고, 개발할 경우 우선될 핵심

가치로 환경(82%)을 꼽았다. 주거지 행태는 마을단위 분산 거주(67%)를 선호했으며 접경지역 에너지 공급방식도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66%)를 선택했다. 2003년과 2019년, 16년 동안 자연을 대하는 가치 기준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조사결과에 힘입어 연구원이 제시한 분야별 일곱가지 협력방안은 이렇다. ▲(자연환경) 산림병해충 피해회복, 양묘장 현대화 ▲(하천) 수변 완충구역 설정, 한강하구 거버넌스 운영 ▲(상하수도) 취수원과 취수방식 결정, 하수시설 기술지원 ▲(자원순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순환계획 수립 지원 ▲(대기) 모니터링과 배출원 조사, 사업장 관리기술 지원 ▲(에너지) 소형 태양광 지원,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 구축 ▲(보건) 남측의 제약과 북측의 천연물 소재를 결합한 R&D 추진, 남북 가족전염병 공동 대응 등이다. 또 DMZ 보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립공원 지정'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라고 알려준다. 이어 보호지역을 정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한 후 국제기구와 함께 'DMZ 보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고려할 가치가 충분하다.

책임있는 단위가 움직일 때다.

## 주민 82% “DMZ 활용 방안 환경적 가치 우선 고려해야”

### 경기연구원 보고서

남북관계 개선과 관계없이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인 DMZ을 보전하고 접경지역을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의 중심축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6일 향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를 대비한 환경 분야별 남북협력방안과 DMZ 인근 지역의 개발과 활용 방향을 제안한 '경기도 남북환경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7월 연구원이 수도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남북 환경협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87%가 DMZ의 환경적 가치가 높다고 응답했다. DMZ와 접경지역 활용·개발 시 우선시해야 할 핵심 가치로는 경제(17%)보다 환경(82%)을 선택했다. 남북 접경지역의 주거지 형태로는 67% 응답자가 마을단위의 분산된 주거지를 선호했으며, 접경지역의 에너지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66% 응답자가 태양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를 선택했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6개 환경 분야별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 산림 병해충 피해회복, 양묘장 현대화 ▲(하천) 수변 완충구역 설정, 한강하구 거버넌스 운영 ▲(상하수도) 취수원과 취수방식 결정, 하수 시설 기술지원 ▲(자원순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순환계획 수립 지원 ▲(대기) 모니터링과 배출원 조사, 사업장 관리기술 지원 ▲(에너지) 소형 태양광 지원,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 구축 ▲(보건) 남측의 제약과 북측의 천연물 소재를 결합한 R&D 추진, 남북 가속전염병 공동대응 등이다.

연구를 수행한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과 개발 전문가, 관련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한 ‘DMZ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백지상태인 DMZ 인근 지역에 기존의 남측 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은희 기자 kcomst@incheonilbo.com